

“국민 신뢰 저버린 책임져야”... 민주·시민단체, 당정 압박

민주당, 세 차례 기자회견 가져
황석영 “尹 실정·무능... 사임 요구”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직권남용 등으로尹·이시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을 촉구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공동에서 종교인·지식인, 해병대 예비역, 야당 소속 국회 운영위 위원 등과 총 세 차례 기자회견을 가지며 ‘의제 지키기’에 주력했다.

해병대 출신인 황석영 작가는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공명심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미흡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들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공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황 작가는 “국가의 근본을 떠받치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는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담보로 내놓을 만큼 위중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정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써 이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군은 어느 위정자의 사

병이나 어느 장군의 출세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아들딸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라며 “이러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이나 일선 지휘관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정치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작가는 “우리는 이제까지 정부를 이끌어 오며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실

정과 무능을 보여준 윤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며, 이후 특검을 위해 상정하고 거부당한 사건들을 차례로 규명해 이를 저지른 자들은 물론 동조하고 방임했던 모든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들은 윤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임 전 1사단장을 비호할 목적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려는 박정호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범위 축소 및 경찰이첩보류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심지어 박 전 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입건을 강행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 이시원은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유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관련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방해했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 운영위 야당 측 간사와 운영위원회 야당 측 위원도 기자회견장을 찾아 국회 운영위 개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개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벌써 6번째다. 야당의 개회요구에 국민의힘은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은 쌓여가는데, 국민의힘이 국회운영위의 문을 굳게 걸어 잠고 있다”며 “운영위는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곳이지 비호하는 곳이 아니다.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사진=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에 술렁

차기 당대표엔 비윤 나경원
원내대표엔 친윤 이철규로 균형
당사자들, 이같은 추측에 선 그어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로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부상하면서, 당대표 자리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에도 반성 없이 ‘친윤 논쟁’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 나 당선자와 이 의원은 25일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은 내달 3일 열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에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에 여의도에서는 이 의원이 최근 연일 당선자들을 만나며 ‘표 모으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철규 원내지도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쪽은 ‘윤심’(尹心)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여소야대 국회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기류를 맞상대할 역량이 필요하고, 여당은 정부와 소통하며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통이 더 원활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면서 이 의원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특검법 표 단속을 위해 친윤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 “수도권에서 대통령 때문에 참패했는데, 친윤 원내대표를 내세우는 게 맞느냐” 등의 불만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당의 간판급 정치인인 나경원 당선자와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이 전당대회와 경선에서 서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나경원-이철규 연대설’까지 나왔다.

원내사령탑은 친윤이 맡는 대신, 당권은 비윤(비윤석열)이자 수도권에 기반을 둔 나 당선자가 잡아야 균형이 맞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수도권 기반인 나 당선자가 전면에 나서야

국민의힘이 ‘영남당’ 이미지를 벗을 수 있다는 게 연대설의 근거다.

‘나-이 연대설’에 당내에서는 불만이 제기됐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정권 심판을 초래한 대통령 심복이 반성과 자숙은커녕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대통령의 인식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내주고 있다”고 이 의원을 직격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종전처럼 하수인을 내세워 당을 좌지우지할 생각이 아니라면, 민심을 거스르는 일련의 행태를 자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이 연대설’의 당사자들은 이같은 추측에 선을 그었다. 나경원 당선자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 혹은 “그냥 웃을게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당대표를 내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다만 당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나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꼭 당대표를 결심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나-이 연대설’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다만 원내대표 도전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당 대표 선출은 전적으로 당원들의 몫”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이 연대설’에 대해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국민께서 여야 없이 처리하라고 명령하신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용산 바라기’의 등판이라니 참담하다”면서 “국민을 섬길지도 친윤당이 될지 선택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

‘경포당’ ‘영남 자민련’... 與 토론회, 쓴소리 난무

여의도연구원, ‘총선이 남긴 과제’ 토론회
“당과 반대로 행동” “尹 이미지 망해”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당 차원의 토론회에서는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경포당), ‘영남 자민련’ 등 쓴소리가 쏟아졌다. 지난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문을 쓰기 위한 자리로, 당 차원에서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접 총선을 뒀 후보들이 당의 선거 전략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현역 의원, 당선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박명호(왼쪽 세번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총선평가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뉴스시스

우선 ‘강북 협지’에서 당선된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자는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 했다”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고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은 단언컨대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고 토론했다.

경기 고양병에서 낙선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

는 건 콘텐츠가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라는 걸 많이 느꼈다”면서 “대통령의 큰 정책이 문제라는 것보다 나는 대통령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울러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 최고경영자 이미지)’가 완전히 망했다.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도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 기자

“‘先구제, 後회수’ 전세사기 개정안 부의”

홍익표 “내달 본회의서 처리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선(先)구제, 후(後)회수’ 원칙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부의하고 22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를 처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눈물과 고통을 방치했다”며 “지난 2월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초 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1만5433명으로 늘었으나, LH가 매일

한 주택은 1건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빚 부담이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제외한 피해지원 제도 이용 비율은 10%도 안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한 숫자보다 많은 2만5000명으로 가정해서 ‘선구제, 후회수’ 소요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원의 소요를 발표한다”며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원에 미치지 않고 ‘선구제, 후회수’가 이뤄져 손실율이 50%가 될 경우 그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도시보증기금 여유자금 운영규모가 29조원에 달해서 자금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며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최소한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